

“완전한 일상회복 멀다 불평등·격차해소 올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with 코로나시대 전인류의 운명
고용위기 극복, 피해지원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 전반에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행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힘써달라는 당부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이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주문한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지원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투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방사청,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나서

460억 투입 외산장비 국산 교체

지난해 중국이 서해의 자국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우리 관할해역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동원 해상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 8일 LIG넥스원과 체계개발을 체결한 장거리레이더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 탐지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송된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60억 원이

다. 이번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국외에서 도입해 온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019년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재추진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계개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또 野 패싱... 정의용 청문보고서 단독채택

(28번째)

野 “北 비핵화 될것 처럼 국민 기만”
與 “김정은 등 설득, 韓 봄 이끌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 5일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외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외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외교부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 수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이 가운데)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또 오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논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날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 쓴 내역을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월 230만원”이라며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원 가까운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 간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이 577만여원인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의혹들을 (9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오병이’ 어장관’의 실체를 국민앞에 낱알이 밝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 신규 투자

국표원, 총 예산 12% 증액 374억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 R&D 과제를 8일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으로, 이 가운데 130억원이 신규과제에 투자된다.

우선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54개 과제에 94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각각 9억원(7개 과제), 5억원(4개 과제)을 지원한다.

지난해 제3차 추경(30억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텔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됐던 국제표준 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해 17억원(5개과제)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의료·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해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스마트팜 R&D 신규과제에 406억 지원

실증·고도화에 190억 등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8개 신규 과제에 406억원을 지원하는 올해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사업을 지난 5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는 기존 스마트팜 R&D를 통해 개발한 2

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과 품목(작목, 종중)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를 위해 총 26개 과제에 18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과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신규과제에

21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 설립한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이 통합 관리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정책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한 스마트팜 기술의 검증·실증연구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연구개발 수행 중 산출되는 연구 데이터는 사업단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 후 분석·활용해 농업 분야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